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kr>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23-11-사무-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

제 목 : [보도자료]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3. 11. 1.(수)

전송매수 : 총 15매

[사후 보도자료]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3. 11. 1.(수) 오전 10시

■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 정부 들어 언론장악 시도와 언론의 자유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장악 기술자’라 불렸던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KBS,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불법적이고 저열한 방식으로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였다가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KBS 사장 투표에서는 유례없이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가장 충실한 하수인인 검찰을 동원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기처럼 여겨지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낮설지 않을 정도로 빈번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적인 권한을 넘어 인터넷언론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언론의 내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압수수색과 내용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3.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권리이고, 우리는 지금의 헌법을 갖추기 위하여 수십년을 피흘리며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정부의 언론탄압으로 우리가 오랜 기간 소중한 생명과 희생으로 쌓아 올려온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러한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2023.10.18.(수)~10.31.(화)까지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을 진행하였으며, 총 000명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이 이번 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5.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이 정부를 향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자 개최한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기자회견장에 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23. 11. 1.(수) 오전 10시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행>

사회 : 류신환 변호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 발언1 : 민변 조영선 회장(300인 선언 취지 발언)
- 발언2 : 선재원 의장(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 발언3 : 이진순 상임공동대표(민주언론시민연합)
- 선언문 낭독

김준현 변호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 **별첨1: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80인 선언문 및 선언 참여자 명단**

[현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문]

윤석열 정부는 언론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하라.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자양분이자 버팀목이다.

언론이 방종하여 인권을 침해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론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언론 자유의 토양을 오염시킨다면 이는 언론자유에 대한 폭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저항은 당사자인 현업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 모두의 절박한 의무이다.

현 정부의 행태는 어떠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임기를 마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뒤 다수의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기술자’라 불리는 이동관을 임명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새로 임명된 이들은 주권자인 국민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국회로부터 그 어떤 정당한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방송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심의 권한의 근거를 찾을 수도 없거니와, 기관 출범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위법한 심의의 칼 끝이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향하고 있음은 굳이 눈을 크게 뜨지 않더라도 너무나 선명하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사명으로 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정권을 대신하여 초헌법, 초법률적 월권을 수단삼아 노골적으로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이다.

KBS,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계획 역시 불법을 넘어 치졸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방문진 이사장을 불법적으로 몰아내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지만, 그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더구나 KBS 이사회가 결선투표를 무리하게 미루고, 선임에 반대하는 이사 및 경쟁 후보를 사퇴시킨 뒤 정권이 낙점한 인사를 새 사장 후보로 만드는 과정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충실한 하수인이라 여겨지는 검찰 역시 일사불란하게 언론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시절 최소한의 금기처럼 여겨지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낯설지 않게 빈번하다. 더구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거론하는 혐의들, 즉 이태원 희생자 명단공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등의 사유들은 정권의 안위 또는 최상위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언론들은 반드시 응징하고야 말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드러내 보인 것이다. 검사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익의 대변자’라는 의무이자 권한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패거리들의 그것으로 스스로 끌어내렸다. 영장 통제에 관한 법원의 소극적 태도까지 더해져, 지금 검찰의 집요하면서도 막강한 권력은 직접 당하는 언론인들에게는 공포와 무기력을,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는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금 불법적인 언론장악 시도로 인하여 우리 언론 환경은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다. 헌법이 우리 시민에게 성스럽게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억압받고 있으며, 오랜 기간 소중한 생명과 희생으로 쌓아 올려온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를 방관한다면 저들이 뿌려대는 폐습과 패악의 씨앗들은 장래 언젠든 잡초처럼 자라나 우리의 민주주의를 뒤덮을 것이다.

언론과 시민을 길들이려는 정권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우리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은 오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모아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경고한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 법률가/교수/연구자들은 감히 그 저항의 선두에 설 것임을 다짐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

2023.11.1.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80인 일동

[선언 참여자 명단]

전체 380명

<교수 및 연구자> 193명

강경란, 강경숙, 강구섭, 강남훈, 강상현, 강성, 강승규, 강승호, 강우진, 강재구, 강홍석, 고영진, 고영철, 곽차섭, 구재모, 권오근, 기영석, 김갑년, 김경한, 김교빈, 김귀옥, 김도형, 김동규, 김동조, 김만재, 김명하, 김명환, 김명환, 김문숙, 김문주, 김미경, 김상숙, 김서중, 김선일, 김성희, 김소진, 김순남, 김승희, 김연찬, 김영아, 김영주, 김용석, 김은규, 김인숙, 김일규, 김임미, 김재완, 김재훈, 김정희원, 김제완, 김종서, 김준, 김준일, 김진균, 김진동, 김진성, 김진환, 김한석, 김형배, 김혜영, 김호범, 나명수, 나익주, 남정희, 남중섭, 노진철, 노태호, 류동일, 류진춘, 류희식, 박경신, 박미리, 박미정, 박민, 박병전, 박성현, 박소영, 박영식, 박종균, 박종렬, 박지웅, 박철웅, 박총환, 박현상, 박효엽, 배성인, 백미숙, 백정숙, 서영이, 선재원, 손광락, 송광일, 송기찬, 송병삼, 송주명, 신경호, 신명아, 신상범, 신예호, 신옥주, 심영섭, 안승택, 안용주, 안철택, 양원영, 양해림, 염친희, 오동석, 우동필, 우희종, 원동욱, 위경혜, 위대현, 유병제, 유세종, 유승익, 유정, 유지나, 윤남식, 윤병학, 윤선구, 윤영삼, 윤혜영, 윤희섭, 은우근, 이경호, 이규봉, 이도흠, 이득재, 이병채, 이수진, 이숙현, 이승렬, 이왕기, 이원영, 이재인, 이종복, 이종우, 이종춘, 이지선, 이진순, 이창현, 이태행, 이한길, 이형숙, 이홍천, 임운택, 임재홍, 임헌석, 장경욱, 장낙인, 장수명, 장수찬, 전규찬, 전방욱, 전성원, 전해은, 정병기, 정보선, 정연우, 정인숙, 정일영, 정재원, 정태식, 정한중, 조경배, 조덕연, 조승현, 지명구, 진태원, 채영길, 채형복, 천정환,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성용, 최은경, 최인철, 최정욱, 최지연, 최한미, 최혜경, 하수정, 하원수, 하종강, 한유석, 한유진, 한형순, 허찬행, 허창수, 홍서연, 황권택

<변호사> 187명

강대성, 강문대, 강보경, 강수영, 강신하, 고영구, 고윤덕, 고종윤, 권석현, 권영국, 권정호, 권혁근, 권호현, 김경지, 김남근, 김남주, 김도형, 김민수, 김병욱, 김상은, 김상현, 김성순, 김성훈, 김세희, 김소리, 김수영, 김수지, 김연주, 김용규, 김용채, 김원규, 김유정, 김은진, 김재용, 김종귀, 김종희, 김주연, 김주현, 김준우, 김준현, 김종민, 김지미, 김진, 김진국, 김진형, 김차곤, 김태근, 김하나, 김한주, 나연찬, 남성욱, 남현우, 노진호, 노푸른, 류다솔, 류신환, 문은영, 문한성, 민경한, 박구진, 박다혜, 박동민, 박동훈, 박서진, 박성민, 박수관, 박연철, 박영립, 박재홍, 박준모, 박천우, 박한희, 방정환, 배경렬, 백민, 백승헌, 백신옥, 백주선, 서범진, 서영우, 서채완, 서치원, 서희원, 성상희, 성창익, 소삼영, 소현민, 송기호, 송봉준, 송우철, 송현순, 신미용, 신의철, 신하나, 안상배, 안영도, 오동현, 오민애, 오선희, 오세범, 오현희, 우지혜, 위은진, 유남영, 유선호, 유승희, 윤복남, 윤성봉, 이강혁, 이강훈, 이덕우, 이동우, 이동주, 이명춘, 이상호, 이석, 이소아, 이영기, 이용우, 이원호, 이은심, 이인람, 이재화, 이종훈, 이주언, 이주희, 이준형, 이찬진, 이창민, 이철원, 이학준, 이희영, 임선숙, 임윤태, 임자운, 임재성, 장경수, 장덕천, 장범식, 장서연, 장완익, 장유식, 장주영, 전범진, 전수진, 전시은, 정기호, 정미경, 정민영, 정병욱, 정승균, 정연순, 정은영, 정일연, 정재성, 정재현, 정준영, 조세현, 조수진, 조숙현,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영신, 조윤희, 조인영, 조지훈, 조현삼, 조혜인, 좌세준, 주선민, 차지훈, 천윤석, 최새안, 최석군, 최석봉, 최성주, 최용근, 최용문, 최정규, 최종연, 하주희, 한명욱, 한진수, 한택근, 황규표, 황호준

*별첨2: 기자회견 발언문 및 기자회견 사진

● 발언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오늘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백척간두, 절체절명의 위기에 달려 있다는 위기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도어스테핑 중단, mbc기자 전용기 탑승배제 등 편향적 언론관을
가져온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된, 임기가 2개월 남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어코
면직시켰습니다. 결국, 언론 장악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결국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KBS,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불법적이고 저열한 방식으로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였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을 걸렸고, KBS 사장 투표가 유례없이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불편한 뉴스를 보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선 언론장악을 위한 80년
전두환식 음모에 다름 아닙니다.

최근 검찰은 소위 신학림, 김만배의 2021.9.15.자 대화록을 ‘허위 인터뷰’에 ‘가짜 뉴스’라고
단정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봐주기 수사의 진실이 밝혀진 바 없고
여전히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신-김 대화하였던 2021.9.15.로 돌아가보면, 당일 국민의 힘 당
대통령 후보 8명이 선출되었고, 민주당은 한 달이 지난 10.10에야 비로소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습니다. 적어도 9.15대화록은 윤석열, 이재명 또는 그 누구를 위하여
허위내용을 공모할 상황도, 굳이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 이후 몰아닥친 광기 어린 광풍, 즉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을 근거로 뉴스타파 및 기자 2명,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26.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등 전현직 기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갔습니다.

해당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먼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처벌의사도 밝히지도 않은 사건을 이처럼 검찰이 나서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전후 후무한 특혜일 뿐입니다. 특히 검찰이 조모씨 봐주기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되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라면, 이는 대통령 개인을 위하여 국가공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는 대표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은 박영수 변호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당시 중수부 검사들만이 알고 있는 만큼, 이들을 첫 봐주기 수사대상으로 삼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어도,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학림, 김만배 배임수증사건과 관련 없는 명예훼손 사건이기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배임수증죄와의 '직접 관련성' 범위를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확장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 압수수색 대상과 수사과정을 살펴 위임범위를 넘어선 수사권남용, 직권남용인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백보, 천보 양보하여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언론이 사실을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공익적인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 기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에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위 신학림- 김만배 대화록을 기화로 검찰, 방통위, 방심위, 문체부, 서울시 등 온갖 기관과 수사권을 동원하여 언론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례없는 보도 정황 자료 요청과 인터넷 언론 심의는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 스스로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행태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탄압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언론의 목을 비틀어도, 언론 자유의 새벽은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언론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발부 남발이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을 엄히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검찰은 검찰식구 감싸기 수사에서 벗어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내막과 법조 카르텔의 진실을 밝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 **발언2: 선재원 상임공동의장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이다.

시민과 언론동지들은 독재정권에서 언론을 지켜내어 한국 민주주의를 진전시켰다.

언론이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민주주의의 제도가 정의롭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을 출세우고 자기검열을 강요하고 있다. 뉴스타파 등 어느 정권에도 기울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조차도 탄압을 일삼고 있다. 자신들의 치부가 낱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는 군사독재 시절이었던 1980년 신군부 주도의 언론 통폐합을 교묘하게 답습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 동지들의 투쟁으로 실패한 언론장악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 기회를 틈탄 모리배들은 퇴행적인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 교수연구자와 함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는 언론 동지들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발언3: 이진순 상임공동대표(민주언론시민연합)**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꼽는다면 언론입니다. 이 변화는 통탄스럽게도, 시대적 추이에 따른 발전적 변화가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적 반민주적 변화’입니다. 이것은 수십년간 시민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전면전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은 세 가지 면에서 문제입니다. 첫째 언론탄압의 주체입니다. MBC의 바이든-날리면 사태, 뉴스타파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의혹 보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의 최고정점인 대통령실이 선두에 서서 언론탄압 전면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전락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언론을 때려잡는 행동대원으로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를 잃고 오로지 한 사람 대통령의 심기보좌를 위해 충성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문란케 하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둘째 언론탄압의 이유입니다. 가짜뉴스를 소탕한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왜 가짜뉴스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하고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제기하고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게 잘못입니까?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본사와 기자,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KBS, JTBC, YTN에 최고 징계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적 범죄’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선거공작을 위한 허위조작보도라는 것인지, 진실은 무엇인지 객관적 물증으로 반박하진 않습니다. 언론탄압의 이유는 권력의 심기를 건드린 패شم죄이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인 기준과

강제력으로 비위를 거스르는 언론인들을 숙아내고 비판적인 언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입니다.

셋째 언론탄압의 방법입니다. 방통위, 방심위, 한국언론진흥재단, KBS, 방문진, EBS, TBS 임원에 대해서 무더기 해임과 권력친화적 인물로의 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고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비롯해서 YTN 사영화, TBS 지원조례폐지 등으로 공영성을 거세하고 재정적 목줄을 조이는 전략도 병행됩니다. 방심위는 법적 권한을 벗어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뉴스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포털 제재와 개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탈법적이고 무원칙한 무차별 제재로 인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집행정지되고 YTN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고 더탐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어도 반성은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더기 무차별 제재는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마저도 우습게 여깁니다.

언론탄압의 주체와 이유와 방법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은 자의적이고 무도하며 반헌법적입니다. 성역 없는 비판과 권력 견제는 언론의 제1 사명입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비리의혹을 제기하면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반국가사범으로 내모는 권력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독재일 뿐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혜롭고 용기있는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 오늘 서명에 참여한 전국의 지식인들과 함께, 야만적인 언론탄압에 대항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기자회견 사진



